

## TPP 참여로 시장 확대와 생산네트워크 강화의 기회 잡아야

최근 TPP가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TPP 협상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TPP 참여시 우리나라는 시장 확대 효과와 생산네트워크 참여 효과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TPP를 통해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5개국과의 FTA를 단번에 체결하고 한-ASEAN FTA에서 개방 수준이 낮았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對TPP 해외투자가 활발하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TPP 생산네트워크 참여도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 1 TPP 연내 협상 타결 실패, 내년 1월 각료회의 재개최

- 12.7~1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TPP 각료회의 개최 결과, TPP 참여 12개국들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며 연내 협상 타결에 실패
  - 주요 쟁점 분야는 상품개방,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등으로 상품개방과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견차가 컸고, 지적권 및 경쟁정책 분야에서는 美·日 등 TPP 내 선진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사이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남
  - 21개 협상 분야(협정문 29장) 가운데 17개 분야에서 일부 합의하거나 진전된 양상을 보였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음
- TPP 협상 타결이 다시 연기되며 협상 추진 동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14.4~5월경이 협상 타결의 실질적 데드라인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 TPP 참여국들은 내년 1월초부터 수석대표 회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1월 하순 각료회의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지만, 협상의 새로운 타결 시한도 설정하지 못함에 따라 협상 추진 동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음
    - TPP 협상은 '12년에도 연내 타결 목표를 세웠다가 '13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며, 금번에도 협상 타결을 미루게 됨
    - 내년 1월 TPP 각료회의는 1.22~25일 다보스 포럼 계기 추진을 검토
  -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내년 11월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어 협상보다 선거 이슈가 우선시될 가능성이 큰 만큼 내년 4~5월경이 타결의 데드라인이 될 전망
    - 특히, 4월 오바마 美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전후가 협상 타결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

- o 또한, TPP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 美정부가 의회로부터 대외무역협상의 권한을 위임받는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무역촉진권한) 입법이 긴요해 보이거나 美의회에서 TPA에 대한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어, TPP 참가국들 사이에서 합의내용에 대한 美의회 수정 요구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02년 법안이 성립된 TPA는 '05년 연장된 이후 '07년 실효되었고, TPA 실효 이후 美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FTA는 TPP와 TTIP 뿐임

### TPP 협상 추진 경과

연도	세부 추진동향
'06년	5월, P4 협정 발효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브루나이 4개국
'08년	美, 협상개시 의사 표명
'09년	美정부, 8개국 간 협상 개시 美의회 통보 - 기존 4개국+美, 호주, 페루, 베트남
'10년	3·6월 1,2차 협상, 10월 3차 협상(말레이시아 참가로 9개국), 12월 4차 협상
'11년	2·3·6·9·10·12월, 5~10차 협상 11월, APEC 정상회담 계기- 일본, 캐나다, 멕시코 참가 목표 협의 개시 표명
'12년	3·5·7·9월 11~14차 협상, 10월 멕시코, 캐나다 참가 위한 9개국 절차 완료 11월 태국이 TPP 참가위한 국내절차 착수 표명, 12월 15차 협상 - 멕시코, 캐나다 신규 참가로 총 11개국
'13년	3월 16차 협상, 3.15일 - 일본의 TPP 참가선언 4.20일 TPP 11개국 통상장관 회의, 일본의 참가 전원일치 합의 5월 17차 협상, 7.15~25일 18차 협상 - 일본은 23일부터 3일간 공식협상 첫 참가 8.22~30일 19차 협상, 22~23일 각료회의 - 연내 협상 타결 목표 재확인 9.18~21일 협상 수석대표 회담 10.8일 APEC 계기 TPP 정상회의 개최 - 섣다운 문제로 美 오바마 대통령 불참, 기본 합의 추진했으나 실패하며 연내타결 목표만 재확인 10~11월 지재권 등 분야별 회의, 11.19~24일 협상 수석대표 회의 12.7~10일 TPP 각료회의 - 핵심 쟁점 미합의로 협상 타결 실패, 논의 지속 합의(우리나라의 논의 동향) 11.15일 한국 TPP 참여 관련 국내 공청회 11.29일 한국 TPP 협상 참여 관심표명 12.3일 한국 WTO 각료회의 계기 예비 양자협의 개시
향후 일정	'14.1월초~ 수석대표 회의 예정 '14.1월말~ TPP 각료회의 예정 - 1.22~25일 다보스 포럼 계기 추진 검토 '14.4월 오바마 美대통령 아시아 순방 전후 협상 타결 추진 가능성 '14.11월 美의회 중간선거 예정

자료: 각국 정부 자료 및 언론 자료 종합하여 정리

## 2 TPP는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최대 수준,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 지향

- TPP가 체결될 경우 경제 규모면에서 EU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수준의 경제블록이 탄생하게 됨
- o TPP의 경제규모는 27.6조 달러로 전 세계 GDP의 38.4%를 차지하며, EU, NAFTA는 물론 현재 추진 중인 RCEP을 능가하는 경제블록임

### 주요 경제블록의 경제적 위상 비교

구분	FTA	명목GDP		교역규모		인구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규모	비중
메가 FTA	TPP 12개국 (한국 포함시)	27.6조 달러 (28.7조 달러)	38.4% (40.0%)	9.6조 달러 (10.7조 달러)	26.5% (29.4%)	7.9억 명 (8.4억 명)	11.2% (11.9%)
	RCEP	21.2조 달러	29.5%	10.5조 달러	29.0%	34.3억 명	48.7%
	한·중·일 FTA	15.3조 달러	21.4%	6.6조 달러	18.2%	15.3억 명	21.7%
선진국간 FTA	TTIP(美·EU)	32.2조 달러	45.0%	15.1조 달러	41.7%	8.2억 명	11.7%
	EU·일본	22.5조 달러	31.4%	13.0조 달러	35.8%	6.4억 명	9.0%
기존 경제블록	EU 28개국	16.6조 달러	23.2%	11.3조 달러	31.1%	5.1억 명	7.2%
	NAFTA	18.7조 달러	26.1%	5.6조 달러	15.4%	4.7억 명	6.6%

주: %는 쉐세계 GDP, 교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IMF, Global Insight

- TPP 협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분야횡단적 이슈(Cross-cutting Issue) 등 새로운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정을 지향
- 높은 수준의 상품 시장 개방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중이며,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
- 협상 분야는 21개 분야로, 협정문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새로운 분야로 꼽히는 분야횡단적 이슈의 경우 정합성, 경쟁력 및 비즈니스 원활화, 중소기업,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구성됨

### TPP의 협상 분야

① 상품 시장 접근				서비스			
공업	섬유·의류	농업		⑩ 국경간 서비스	⑪ 일시 입국	⑫ 금융 서비스	⑬ 전기 통신
② 원산지 규정				⑭ 전자상거래			
③ 무역원활화				⑮ 투자			
④ SPS(위생검역)				⑯ 환경			
⑤ TBT(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⑰ 노동			
⑥ 무역구제				⑱ 제도적 사항			
⑦ 정부조달				⑲ 분쟁해결			
⑧ 지식재산				⑳ 협력			
⑨ 경쟁				㉑ 분야횡단적 이슈			

자료: USTR, 일본 외무성 등

3

상품(미국 對 일본), 지적권 및 경쟁(선진국 對 신흥국) 등이 최대 쟁점

- TPP 협상의 21개 분야 가운데 분쟁해결, 전기통신, 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SPS, TBT, 협력, 무역구제, 제도적 사항, 분야횡단적 이슈 등 10개 분야는 대부분 합의하고 실무적 작업만 남은 상황임

- 분쟁해결 분야는 그간 중재인 선정 문제로 심의 개시 기간이 오래 걸렸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중재인 후보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내용에 합의
- 이외에도 신규 시장 참여자에게 통신망을 개방하는 내용을 주된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 분야,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창구일원화를 논하는 무역원활화, 중소기업의 TPP 활용을 위해 절차 등을 소개하는 사이트 개설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투자,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국경간 서비스, 금융 서비스, 일시입국, 노동 등 7개 분야는 합의에 가깝게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투자 분야에서 이슈가 되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서는 호주 등이 도입을 반대해 왔으나 남용 예방, 건강관련 제도의 적용예외 설정 등을 통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는 신정권 출범('13.9월) 후 '13.12월 타결된 한-호주 FTA에서도 ISDS를 도입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반면, 멕시코는 ISDS 예외 대상에 건강 관련 등이 설정될 경우 주요 수출품인 데킬라 등이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을 우려
- 원산지 규정은 통일원산지 규정과 누적원산지 규정 도입 원칙에 공감하고 적용 시점과 범위 등을 논의중이며, 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이견이 첨예한 섬유 의 원사기준(yarn forward) 도입 논의도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경간 서비스의 경우 베트남 등 신흥국의 소매유통 출점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이고, 금융 서비스는 미국 등이 신흥국의 은행·보험 시장 개방 및 출자 비율 완화 등을 요구
- 협상 타결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분야는 상품, 지적권, 경쟁 등으로 회원국간의 이견차가 커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환경 분야 역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 양자 협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상품 분야는 농산물과 자동차 시장 개방을 두고 미국과 일본이 견해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으로, 양국간 합의 내용이 향후 다른 국가 간 논의의 기준이 될 전망으로 미·일간 합의 없이는 협상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소위 성역 5개 분야(쌀, 유제품, 사탕수수, 밀, 쇠고기·돼지고기)의 관세 철폐 예외를 주장하며 절충안으로 성역 가운데 가공품 등 일부 분야의 개방 혹은 일정 물량의 저율관세할당(TRQ)을 제시하며, 미국측의 자동차 및 부품의 관세 조기 철폐 등을 요구
  - 일본이 양자 FTA 개방 수준은 현재까지 80%대 후반에 머물렀고, 지금까지 관세를 철폐하지 않던 품목이 930여개에 달했음
  - 성역 5개 분야(586개 품목)를 모두 제외할 경우 일본의 관세 철폐 비율은 93.5% 수준으로, 일본은 현재 92~95%의 관세철폐 비율을 제시하고 그 이상은 일정 물량만 저관세로 수입하는 TRQ 등의 수용 가능성 검토
  
- 미국은 일본측에 10년 이상 장기 철폐를 통해서라도 성역 포함 100% 관세 철폐를 요구,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은 자국 시장 개방에 대해 장기철폐, 세이프 가드 도입 등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며 일본 시장의 비관세 장벽 개선 요구
  - 미국의 자동차 관세는 승용차 2.5%, 트럭 25.0%로 일본에 대한 관세 철폐를 최대한 늦추며 세이프 가드 등의 방어 수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일본 자동차 시장의 폐쇄성, 안전기준·세제 등의 개선 요구
  
- o 지재권 분야는 미국 등이 저작권, 신약 특허 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데 반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 등은 복제약 가격 상승 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
  - 미국 등은 서적, 음악, 만화 등의 저작권 기간에 대해 일부 국가에서 시행중인 사후 50년을 7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는 등 창작 권리의 보호를 주장
  -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신약 개발의 동기가 감소되지 않도록 신약 데이터의 보호 기간을 5년 등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은 복제약 출시의 지연과 가격 상승을 우려하여 강하게 반대
  
- o 경쟁 분야의 초점은 국영기업에 대한 우대 철폐 문제로 미국 등은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국영기업에 대한 제도·세제 등의 우대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영기업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한 베트남,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음
  - 베트남은 7,000여개의 국영기업이 GDP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는 에너지 관련 국영기업이 큰 비중을 차지

### TPP 협상의 분야별 주요 내용

진척도	분야	주요 논의 내용 및 쟁점 사항
<b>난항 4개 분야</b> (상품, 국영기업, 지재권이 최대 쟁점)	<b>상품</b> 美 vs 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자협상 통해 개별 양허안 작성하는 형태로 절충</li> <li>- 최종 개방수준은 96~98% 수준으로 발효즉시 90~95%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나머지는 7년에 걸쳐 인하하는 방식이 전망되나, 일부 품목은 10~20년 등 장기철폐 가능성도 있음</li> <li>· 미·일간 합의 내용이 개별 논의의 준거가 될 것으로 보임</li> <li>- 일본은 성역 5개 분야(쌀, 유제품, 사탕수수, 밀, 쇠고기·돼지고기 등 586개 품목) 개방 제외를 주장하며 절충안으로 TRQ 도입 제안, 자동차 및 부품 조기 철폐 요구</li> <li>- 미국은 10~15년 장기철폐 방식으로 성역 포함 100% 철폐 요구, 자동차 시장 개방 소극적 대응하며 일본의 비관세 장벽 및 시장의 폐쇄성 개선 요구</li> </ul>
	<b>경쟁정책 (국영기업)</b> 선진 vs 신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등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영기업 우대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은 경제적 영향을 염려하며 반대</li> <li>- 베트남은 약 7,000개의 국영기업, GDP의 1/3 이상 추정</li> <li>- 말레이시아는 말레이계 우대정책 시행중, 대형 석유국영기업 페트로나스 등에 미치는 영향도 염려</li> </ul>
	<b>지재권</b> 선진 vs 신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 등이 저작권, 신약 특허 인정기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복제약 생산의 영향을 염려하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이 반대</li> <li>- 미국은 저작권을 사후 50년→70년 이상 확대 주장</li> <li>- 미국 신약 데이터 보호 기간을 5년가량에서 10년 이상 연장에 관심</li> </ul>
	<b>환경</b> 선진 vs 신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美, 日 등은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 적용 주장, 신흥국은 반대</li> <li>· 어업보조금에 대해서는 미국 등은 금지, 일본 등은 유지, 남획 관련 보조금은 금지하는 방향으로 절충중</li> </ul>
<b>합의에 가까워짐 7개 분야</b>	<b>투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SDS는 남용 예방, 적용예외 설정 등을 통해 도입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알려짐</li> <li>- 반대입장을 보이던 호주가 정권교체 이후 변화의 움직임, '13.12.4일 실질적으로 타결된 한·호주 FTA에서도 ISDS 도입</li> </ul>
	<b>원산지 규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원산지 지향, 누적기준 등 원칙 합의, 적용시점 및 범위 논의</li> <li>· 섬유 yarn forward(원사기준) 도입 논의도 일정 진전이 있다고 알려짐</li> </ul>
	<b>정부조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PP내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은 美, 日, 싱가포르 3개국뿐</li> <li>· 당초 신흥국들이 반발했으나 '13.8월 협상부터 유연한 태도 전환</li> </ul>
	<b>국경간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국의 외자 서비스업에 대한 출점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논의</li> <li>- 베트남은 외자계 소매업(슈퍼·편의점 등) 2호점 이상 출점시 심사 강화</li> </ul>
	<b>금융 서비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국들의 은행·보험 등의 외자 비율 제한의 완화 등 논의</li> </ul>
	<b>일시입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즈니스 인력의 해외출장 비자·입국 요건, 체재 절차 간소화</li> </ul>
	<b>노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기준 완화 금지, 부당한 저임금·아동 노동 규제 등 논의</li> </ul>
<b>대부분 합의, 10개 분야</b> (실무작업 지속)	<b>분쟁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재장소(TPP 역내 중재재판소), 심의 개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중재인 후보 사전 작성, 심의내용·서류 공개 통한 투명성 강화 등이 주요 골자</li> </ul>
	<b>전기통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인프라 등 신규사업자 참여기회 개방</li> <li>- 말레이시아 등 WTO에서 통신인프라 개방에 합의하지 않은 일부 국가의 개방 가능성</li> </ul>
	<b>무역원활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관 절차 간소화 및 창구일원화</li> </ul>
	<b>전자상거래</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을 통한 상거래와 관련한 규정, 소비자 보호 기준 등 논의</li> </ul>
	<b>SPS</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의 안전성 확보 위한 규정 논의</li> </ul>
	<b>TBT</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의 안전기준 및 규격에 대한 논의</li> </ul>
	<b>협력</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흥국 등의 협정 준수를 위한 기술 및 인재의 협력</li> </ul>
	<b>무역구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덤핑, 세이프 가등 등 수입금증 등에 대한 긴급조치 논의</li> </ul>
	<b>제도적사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 운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신규 참가국 승인 절차 논의</li> </ul>
<b>분야횡단적 이슈</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제제도간 정합성, 경쟁력·비즈니스 원활화, 중소기업, 개발 등 논의</li> <li>· 중소기업의 TPP 활용을 지원하는 사이트 개설</li> </ul>	

자료: USTR, 일본 외무성, Inside US Trade, 일본경제신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자료 종합

- TPP 참여시 우리나라는 시장 확대 효과와 생산네트워크 참여 효과를 바탕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시장확대) TPP 12개국에는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일본 등 5개국이 포함되어 있어 TPP 참여시 5개국과의 FTA를 단번에 체결하여 시장 확대가 가능하며, 한-ASEAN FTA에서 개방 수준이 낮았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신흥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도 기대됨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등 5개국은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년 기준 15.0%에 달하며 경제규모가 크거나 높은 소득수준으로 구매력이 큰 시장임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과는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FTA 협상을 추진중
      - \* 한·호주 FTA 협상 '13.12.4일 실질적 타결 선언
      - \*\* 일본과는 한·중·일 FTA, RCEP 등 다자차원에서 협상을 진행중
  -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은 한-ASEAN FTA를 통해 이미 FTA를 발효했지만 관세철폐 비중(품목수 기준)이 각각 83.5%, 90.7%로 높지 않으며 특히,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타이어, 기계류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의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TPP를 통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의 경우 한-ASEAN FTA에서 베트남(관세 74%)은 양허제외, 말레이시아(관세 10~30%)는 초민감품목으로 양허해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음
  - 또한, TPP를 통해서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의 소매점포 출점 제한 완화, 통신 인프라 개방, 금융시장 진출 완화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TPP 참여시 우리 서비스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생산네트워크 참여) TPP는 역내 생산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해외투자가 활발하고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중간재를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가능할 전망
  - TPP 협상은 역내 생산네트워크 활성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통일 원산지 규정과 원산지 누적 기준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생산네트워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큼



- 우리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기준 67.6%로 우리나라는 중간재 공급자로서 이미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고, 해외투자가 확대되며 '한국에서 원부자재 조달 → 해외에서 조립 → 제3국으로 수출'의 사업 구조를 영위하는 우리 기업도 많은 상황
- 때문에 TPP 참여시 우리나라는 TPP 역내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중간재 공급자의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TPP 역내에 생산법인을 운영하며 미국 등 주요시장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
  -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일본(58.9%) 등과 함께 중간재 공급국가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74.1%), 베트남(60.9%), 멕시코(49.1) 등은 생산기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TPP 참여시 '한국에서 원부자재 조달 →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등에서 생산 →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으로 수출' 하는 사업구조 하에서 우리 기업은 상당한 혜택이 가능할 전망
  - 실제로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가운데 44.6%가 TPP 역내에 투자되고 있기 때문에, TPP 참여시 우리기업들이 다양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전망

각국의 對세계 수출 구조

(단위: %)

	최종재	중간재	원료·소재
한국	31.6	67.6	0.8
일본	39.6	58.9	1.5
베트남	60.9	21.6	17.5
멕시코	49.1	34.1	16.8
중국	74.1	48.6	1.3

주: 2011년 기준  
자료: RIETI-TID

對세계 해외직접투자內 TPP 비중

(건,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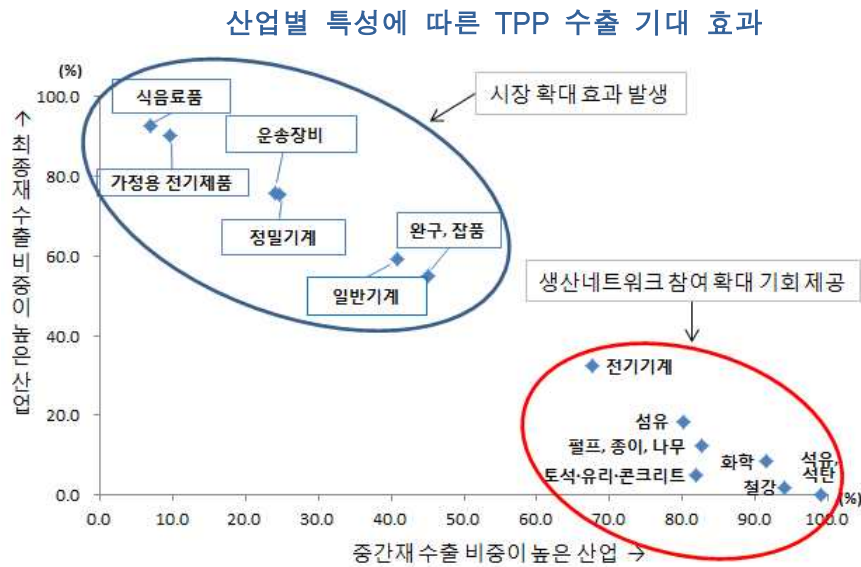
		신고건수	신고금액
최근 5년간 투자	對TPP	19,547	85583.3
	세계 비중	39.5	44.6
전체 투자	對TPP	46,505	145,071
	세계 비중	33.9	40.4

주1: 전체 투자는 '68~13.9월 누적 기준  
주2: 최근 5년간 투자는 '08~'13.9월 기준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TPP 참여로 인한 수출 효과를 산업별로 보면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 증대가 기대되고,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산업들은 역내 생산네트워크 참여를 통해 중간재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운송장비, 일반기계, 가정용 전기제품, 식음료품, 정밀기계 등은 對TPP 수출 가운데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
- 섬유, 화학, 철강, 전기기계 등은 對TPP 수출 가운데 최종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군



자료: RIETI-TID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對TPP 12개국 수출을 분석하여 작성